

서울시 개인파산의 현황과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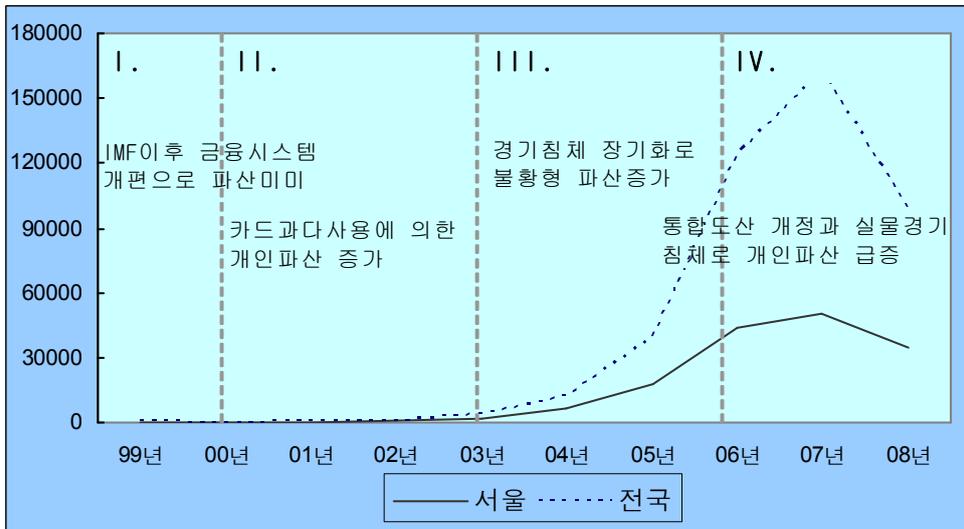
박희석 연구위원 · hspark@sdi.re.kr

한진아 연구원 · cycle13@sdi.re.kr

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

1.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악화 심화로 개인파산 증가세 예상

- 미국 금융위기 촉발로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폭, 금융시장 불안이 상존하는 가운데 실물경기 침체가 가속화
 -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 파산 증가 추이는 가계부채 증가 금융권의 경쟁력 약화, 20~30대 청년층의 실업야기 등과 상호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
 - 최근 3년간 (2006년~2008년) 서울지역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평균 4만건을 유지하는 가운데 급격한 경기 악화로 실적에 따른 개인의 재정상태가 가중되고 있음
 - IMF 외환위기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던 중상층 비중이 개인파산 증가와 더불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



주: 2008년 개인파산 건수는 10월까지의 수치를 나타냄

<그림 1> IMF 이후 개인파산 신청자 수 추이

- IMF 외환 위기 이후 10년간 전국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최근 200배(503건에서 125,313건) 이상 폭등. 2008년 10월에는 약 10만 건에 이르고 있어 2008년 총 개인 파산 건수는 지난해(162,337건)와 비슷한 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
-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서울 지역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를 보면, 1999년~2003년 4년간 3,005건이었으나 2004년~2008년까지는 153,540건으로 51배 넘는 증가율을 보임
- 전국대비 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수의 비중 추이는 1999년~2001년 56.1%에서 2006년 66.7%로 10%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지역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큰폭의 증가세를 보임
- 과거 10년간 개인파산 신청 건수 추이는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금융시스템 붕괴, 과소비형 파산증가, 불황형 파산 증가, 실물 경기침체에 의한 파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
- I. 금융시스템 붕괴시기(1999년 ~ 2000년):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던 시기였으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822건(서울 382건)으로 파산정도가 미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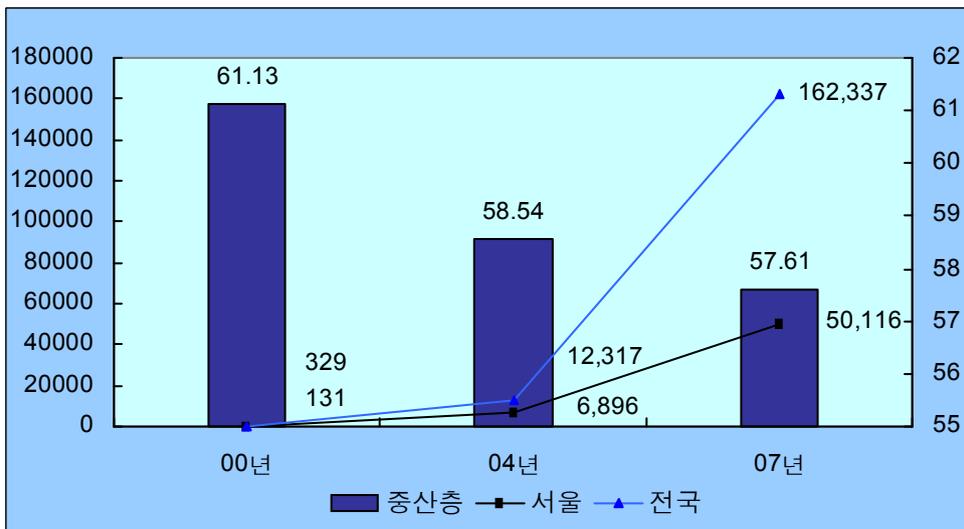
II. 과소비형 파산 증가 시기(2000년 ~ 2003년): 과소비형 파산 증가 시기로 개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절제한 신용카드 사용과 발급으로 개인파산이 증가하기 시작

III. 불황형 파산 증가 시기(2003년 ~ 2006년): 2004년 통합도산법의 개정과 경기침체에 의한 기업 도산, 퇴사 등의 원인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불황형 파산 증가

IV. 경기침체에 의한 파산 증가 시기(2006년 ~ 현재): 고유가에 의한 경기침체와 세계 금융시장 위기로 국내 실물경제 침체에 따라 개인파산이 폭발적으로 급증

○ 개인파산은 외환위기로 감소세를 보였던 중산층 비중을 감소시키고 있어 사회전반의 양극화 현상을 가져올 수 있음

- 중산층 가구 비중은 2000년 61.1%에 이르렀으나, 지난해에는 57.6%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임. 이에 비해 서울의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131건에서 50,116건으로 약 3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이는 개인파산 문제가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계층의 붕괴 및 사회적 문제로 전이될 수 있어 개인파산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이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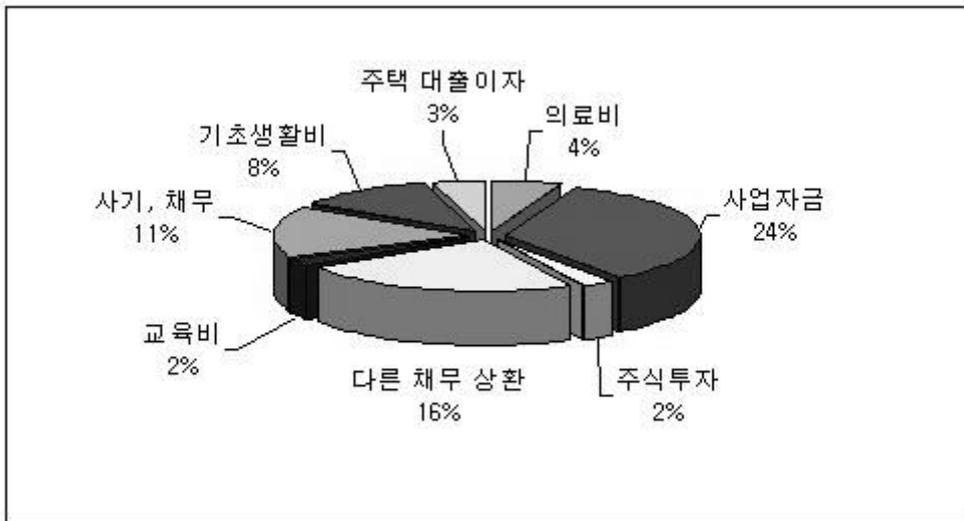
<그림 2> 개인파산 및 중산층의 증가 추이

2. 서울시 개인파산의 원인 및 특성

1) 개인파산의 유형별 원인

○ 개인파산 신청 원인으로는 사업자금(24%), 다른 채무상환(16%), 사기·채무(11%)등의 개인파산 신청이 전체 신청의 51%를 차지

- 이외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채무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기초생활비 8%로 나타났으며 이어 의료비 4%, 주식투자와 교육비가 각각 2%를 차지하였음
- 채무발생 원인 중 다른 채무상환 (16%)의 경우 고소득층의 부분별한 소비지출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가운데 이러한 소비심리가 저소득층의 모방소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음
- 현 시점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생활비 부족, 사기피해, 보증, 병원비 부담 등으로 인한 파산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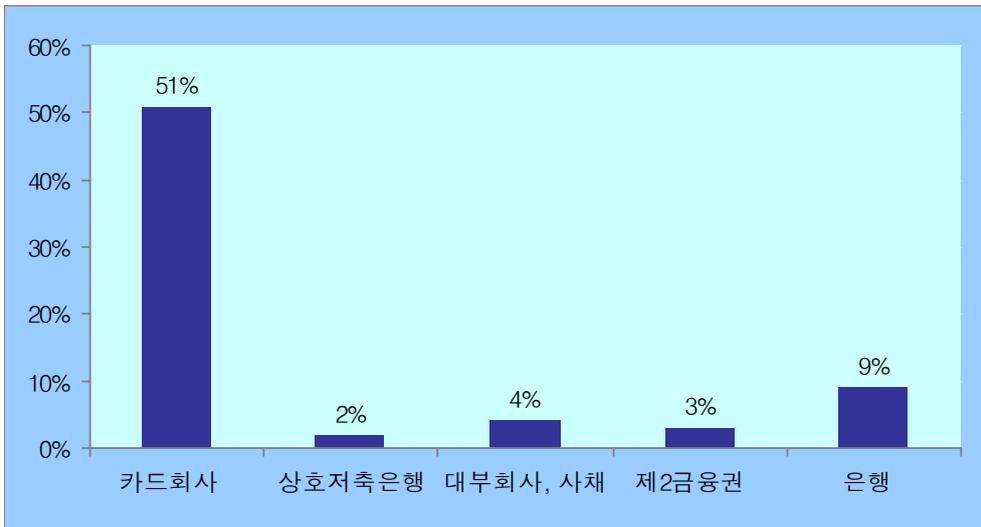


<그림3> 개인파산 신청원인

○ 개인파산의 가장 큰 원인은 무분별한 카드발급 및 사용에 기인함

- 2007년 개인파산과 관련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채권기관별 개인파산 1순위는 카드회사(51%), 은행(9%) 순으로 나타남

- 카드회사가 개인파산의 원인이 된 1순위로 나타나는 것은 신용카드 발급 및 카드사용의 보편화와 개인의 소비능력이 실제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것이 수월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됨
-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소비성향 상승으로 인한 소비 풍조가 확산되면서 신용불량자 양산됨



〈그림 4〉 개인파산의 원인이 된 채권기관의 종류

○ 신용불량자¹⁾, 개인파산의 잠재적 요인으로 향후 개인파산자로 전환 될 가능성이 높음

-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대비 개인파산 신청추이가 1999년 0.025%에서 2004년에는 0.341%까지 증가하였으며, 2002년~2003년 사이에 발생한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가 개인파산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인다고 밝힘
- 따라서 신용불량자중 많은 수가 아직 개인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파산 상태에 있으므로, 신용불량자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잠재파산자의 규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음

1) ‘신용불량자’ 개념은 2005년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개인의 연체 기록은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제공기관의 독자적인 판단을 부가하지 않은 채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과 함께 개별금융회사에 판단자료로 제공되므로, 논의의 편의상 이 글에서는 과거 신용불량자의 용어를 이용함

- 향후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전이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음

○ 통합도산법을 통한 파산절차 간소화로 개인파산자 증가 및 고의적 개인파산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

- 전국과 서울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06년 4월 통합도산법²⁾ 시행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
- 이렇게 개인파산이 급증한 것은 2004년 말 우리나라의 개인파산자 수가 인구 1만명당 2.6명으로 미국 37.8명, 일본 16.5명, 독일 5.9명 등에 비해 적다는 근거로 정부가 선진국 기준에 맞춘 규제완화의 일환인 통합도산법을 개정하였기 때문
- 통합도산법은 파산과 면책의 동시신청 허용, 파산 선고 후 강제집행 정지, 면책재산의 확대, 면책 후 강제 집행시 벌칙규정 신설, 공고방법 규정의 개정 등 파산신청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파산절차를 간소화함
- 이러한 제도적 약점을 악용하여 채무액을 갚지 않기 위한 의도적 개인파산이 늘고 있으며 기업형 법무법인과 브로커 등의 편승으로 최근 면책 허가율이 99%로 급증함

○ 개인파산의 원인과 유형을 종합해보면 개인파산에 이른 원인 가운데 보증으로 인한 채무, 사기 등과 같이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는 문제가 다수 존재

- 급증하는 개인파산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불안 문제와 인적자본의 사장 혹은 마모 등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
- 또한 개인파산 이후 이들이 다시 중산층으로 편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

2) 정식명칭은 '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'로, 회사정리법·회익법·파산법 등 도산3법과 개인채무자회생법 등 4가지로 흩어져 있던 관련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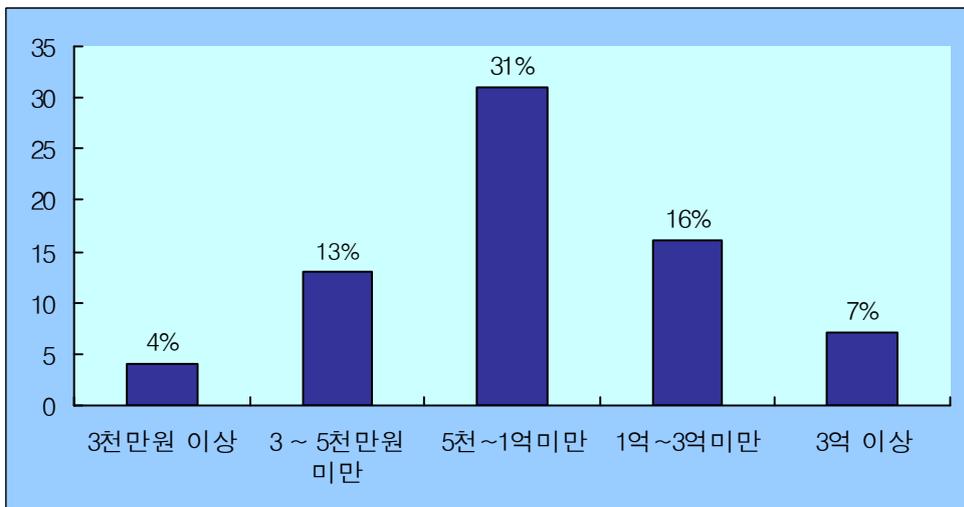


<그림 5> 개인파산 진행 원인 및 유형

2) 서울시 개인파산자의 특성

○ 서울시 개인파산자의 평균 채무액은 5천 ~ 1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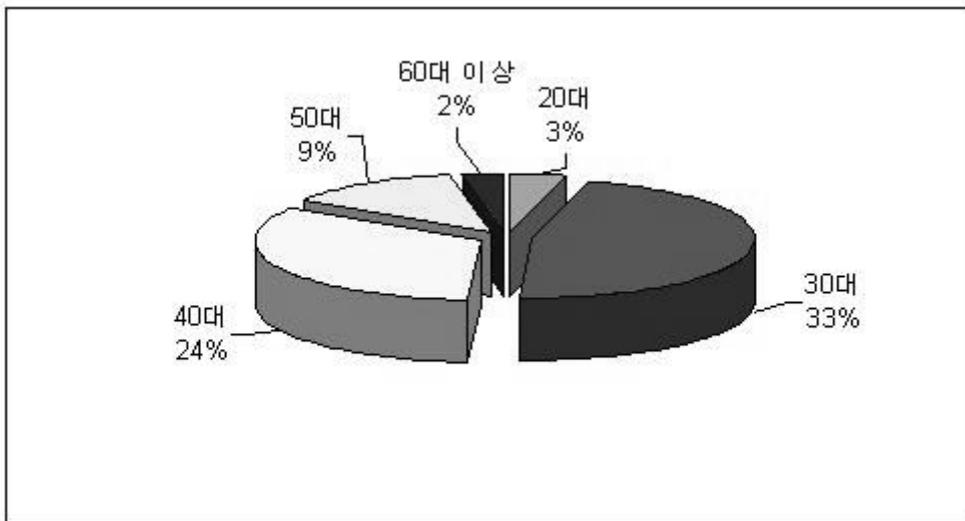
- 연체금액별 신용불량자의 비중은 5천~1억 미만의 채무자가 31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5천만원 이하의 연체자 4%, 1억 이상의 고액연체자 23%로 조사됨
- 따라서 신용불량자수를 줄이고 이들이 개인파산 이전 단계에 파산을 막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취업알선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



<그림 5> 개인파산자의 총 채무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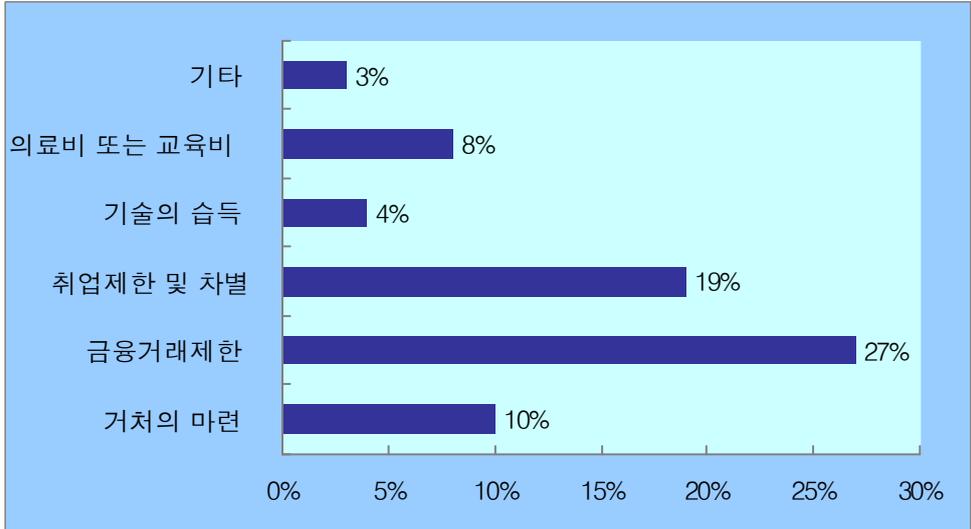
○ 서울시 개인파산자의 36%가 20 ~ 30대의 사회 초년생들로 젊은 계층의 개인파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- 연령대별 개인파산 비중 추이는 최근 40~50대에서 20~30대로 점차 낮아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
- 젊은 계층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개인파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브로커에 의한 영향과 20~30대의 무분별한 소비생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
- 따라서 젊은 계층의 경제적 사망선고와 같은 개인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과소비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,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다시 사회로 재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



<그림 6> 개인파산자 연령별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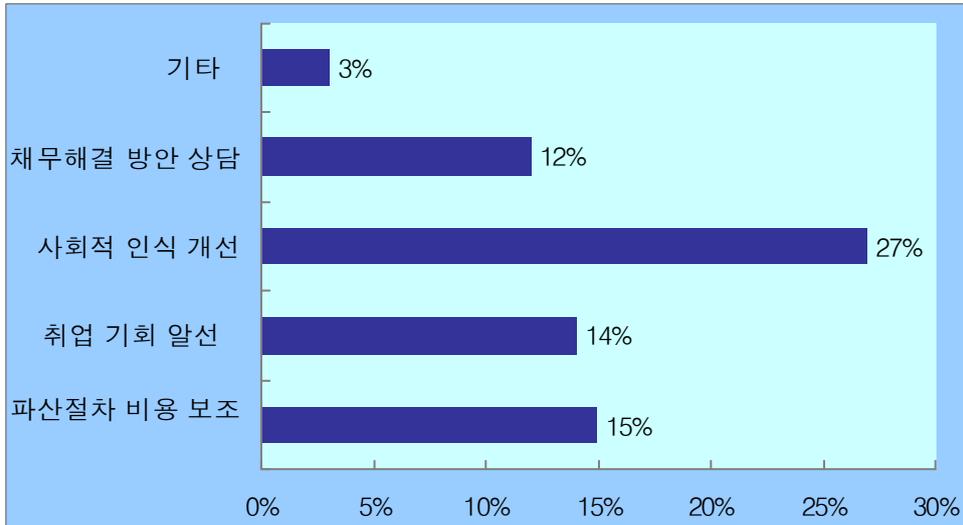
○ 파산자들 중 27%는 금융거래 제한, 19%는 취업제한 및 차별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

<그림 8> 개인파산 후의 경제적 어려움

- 파산 후의 어려움으로는 금융거래 제한(27%)과 취업제한 및 차별(19%)인 것으로 나타남
- 그 외 파산 후 겪는 어려움으로 거처의 마련(10%), 의료비 또는 교육비(8%) 순으로 대부분 기초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파산자들의 파산 선고 후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제도가 필요
- 또한, 재취업을 위한 기술의 습득의 어려움(4%)인 것으로 나타나 파산선고 후 재취업을 위한 기술습득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설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

○ 개인파산자에 대한 서울시의 제도적 지원책으로는 사회적 인식 개선(27%), 파산절차 비용 보조(15%)인 것으로 조사됨



〈그림 9〉 개인파산자들이 생각하는 서울시의 제도적 지원책

- 그밖에 개인파산자가 개인파산 선고 후 서울시에 바라는 제도적 지원책으로 취업기회 알선(14%), 채무해결 방안 상담(12%)의 순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지원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
- 따라서 파산선고 이후 회생을 돕기 위해 파산자들의 취업조건을 완화하고 이들에게 제한되는 직종 수를 축소하여 경제활동 재편입 기회를 제공
- 또한 채무 해결을 위한 상담 및 개인파산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과 상담, 교육 담당 기구 설치 필요
 - 선진국에서는 개인파산과 관련된 비영리단체를 설치, 개인파산자의 상담 및 교육과 파산에 대한 사전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온라인 상담 현금관리 교육을 실시함
 - 파산신청자의 소비성향을 파악하고 과소비 및 생활고 파산 증가를 막기 위해 개인 회생제도를 통한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함

참고문헌

- 유경원, 최근의 개인파산 급증현상과 정책과제, 2005
- 전효찬, 개인파산의 급증과 대책, 2001
- 최수미, 신용불량자 유형별 신용회복 방안, 2004
- 한국개발연구원,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, 2005
- 박희석·박지희, 서울시 개인파산에 대한 심층의견조사, 2007